

뉴시스 사측, 임단협 최종 결렬 책임져야 사측, 16개월 간 임금동결·단협안 거부 반복... '노조 길들이기' 노골화

16개월, 헛수로 3년을 끌어 온 '뉴시스 2017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이 사측으로 인해 최종 결렬됐다.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구성원들에게 사측이 안긴 것은 좌절과 분노뿐이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2016년 10월 임단협을 시작한 이래 24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노조는 3번이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단협안 거부 입장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재 무제표 등 경영자료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으면서 노조에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했다. 오 죽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이 “교섭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교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겠는 가.

지노위 쟁의조정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노조는 합의타결을 목표로 진정성을 갖고 임했다. 만족스 럽진 않지만 파국을 막기 위해 조정안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구성원들의 기대와 신의를 끝내 저버리고 이 조차도 거부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데스크회의를 소집해 ‘호봉제 임금 동결’ ‘호봉제 조합원의 연봉제 전 환 개별 설득’ ‘연봉제 야근 투입’ 등을 지시했고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개별 연봉협상을 재개해 분란만 일으켰다.

우리는 이것이 사측의 ‘노조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의심한다.

사측은 지난 1년여 동안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연봉제 채용, 연봉제 개별협상, 육아휴직 복귀자 지방본 부 파견, 편집국 내 CCTV 설치, 야근 최소화, 연수규정, 구성원 평가 등이 모두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인데도 인사권, 경영권을 주장하며 노조와의 협의를 거부해왔다.

그러면서 되려 노조가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개별 조합원들에게 틈만 나 면 노조와 집행부를 험담하고, 임금 인상을 대가로 조합 탈퇴나 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도 잘 알 고 있다. 심지어 임단협의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지부장에게 “그러면 니가 사퇴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임단협을 거부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뉴시스는 머니투데이그룹에 인수된 2014

년 이후에도 매출과 당기순익이 매년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 매출은 14%, 당기순익은 무려 47,2% 신장했다. 지난해에도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임단협 대신 회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조 협상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호봉제는 계속 임금 동결이라고 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면 임금을 많이 올려주겠다고 회유하는 것은 또 어떤가.

우리는 묻고 싶다. 이것이 정녕 ‘무노조 경영’을 자랑삼는 머니투데이그룹 경영진의 실체란 말인가. 홍정호 머니투데이그룹 총괄사장이 불과 보름여 전 회사 송년회에서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 말인가.

노조는 그동안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임단협에 집중해왔다. 파국만은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고 인내심은 바닥났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조직적 대응과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 경영진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내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영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이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경영진의 편집권 개입을 당연시하고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닿는지 알게 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

<문의> 신정원 지부장 010-4365-4199